

尹정부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통합계획 수립

17개 부처청 및 17개 시도 지방시대 5대전략 실현 4+3초 초광역권 수립 ‘초광역권발전계획’ 첫 포괄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지역 공약을 국가계획에 전면적으로 반영해 관리하는 5개년 중기(中期) 계획이 1일 발표됐다. 이는 역대 최초 사례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제1차 지방 시대 종합 계획 (2023~2027)’을 확정 발표했다. 이 종합계획은 지난 20년간 별도로 수립해 온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최초로 통합 수립한 것으로서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중기 계획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17개 시·도가 제출한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부문별 계

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7개 권역별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반영해 수립했으며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각 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위원회는 종합계획 수립 뿐 아니라 지방시대 국정과제 이행, 종합계획 시행, 지역정책과제 이행 지원 등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앞으로 중앙정부·지자체와 원팀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이끌어 간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난 9월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밝힌 5대 전략을 기반으로 한다. 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이다. 전략별로는 지방분권을 위해 자율적 자치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 자치역량과 지방재정력을 강화한다. 지역맞춤형 자치모델 구축과 지방의 책임성 확보도 추진한다.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 대학 등의 정책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조성과 지방 과학기술 진흥 등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한다. 디지털 혁신과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도 확충한다. 특화발전은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육성과 농·산·어촌 조성 및 이를 촉진할 수 있는 혁신 인프라를 확

충하기 위한 각 분야별 지역정책과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여기서 지역정책과제는 지난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해 발표한 것이다. 신산업 및 특화산업 육성, 교통망 확충, 숙원사업 추진 지원 등이 해당된다. 그간 지역현안과제 추진 시 부처별 분절적인 추진으로 지역의 전체적인 우선순위가 고려되지 못해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 중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과제를 종합계획에 반영해 관리할 예정이다. 과제 이행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전담 부서(지역정책지원과)를 신설했으며 반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 보고한다. 과제별 진행 상황에 맞춰 시·도 및 부처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 예산 반영도 총괄 검토하고 매년 관계부처 및 재정당국에 요청할 예정이다. /뉴스

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이다. 전략별로는 지방분권을 위해 자율적 자치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 자치역량과 지방재정력을 강화한다. 지역맞춤형 자치모델 구축과 지방의 책임성 확보도 추진한다.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육발전특구와 글로컬 대학 등의 정책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조성과 지방 과학기술 진흥 등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한다. 디지털 혁신과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도 확충한다. 특화발전은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육성과 농·산·어촌 조성 및 이를 촉진할 수 있는 혁신 인프라를 확

“정부 사회적기업 예산 삭감 고용불안 가중” 전남도의회 “예산 삭감에 기업과 취약계층 모두 위기”

전남도의회가 정부의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1일 열린 제37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재태 의원(나주3·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그동안 사회적경제가 이룩한 성과는 무시하고 사회적경제를 마치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예산 사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잘못을 바로잡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예산부터 삭감하고 나서는 것은 그동안 쌓아 올린

토대마저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은 사회적경제 기업과 고용되어 있는 취약계층, 이들의 경영과 고용의 불안을 떠안은 전남도를 비롯한 지자체까지 모두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민생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의결된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각 정당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김 호 기자

“학생들 50분 원거리 통학 대책” 촉구 김나윤 광주시의원 “건국·양산·신용동 중학생 207명 원거리”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은 1일 “건국·양산·신용동 207명의 학생들이 마을버스 운행 중단으로 인해 매일 50분 이상을 등·하교에 사용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이 통학 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제321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건국·양산·신용동 학생들은 인근에 중학교가 없어 원거리에 배정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3개 지역은 8개의 초등학교가 있지만 중학교는 4곳밖에 없어 지난 2021년 102명, 2022년 131명, 올해는 207명의 학생이 학교군 외인 용봉, 오치, 문흥, 일곡동 등으로배정됐다”고 밝혔다. 또 “광주지역 전체 초등학교 졸업생 중 학교군 외 배정된 학생은 282명으로 건국·양산·신용동 지역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는 한계 중학교의 전체 학생수와 같은 수치이며 현재 신설중인 가칭 ‘용두2초’까지 개교하면 원거리 배정 학생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학생통학지원조례’와 ‘작은학교 및 초등학교설치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학교와 병설유치원 36곳, 1871명을 대상으로 5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통학버스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지만 원거리 배정 학생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건국·양산·신용동 학부모들이 지난 2021년 통학버스 지원을 요청했지만 안전과 마을버스가 운행된다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결국 마을버스는 운행난으로 멈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주 기자

전남도, 무안서 오늘 공항 유치 강연회 전남여성가족재단서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 필요 설명

광주시 산하 광주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무안지역 주민들의 광주 군·민간공항 동시 이전 찬성 여론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가운데 전남도가 공항유치 필요성을 적극 알리는 장을 연다. 전남도는 오는 2일 오후 2시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무안 남악·오통 신도시 도민을 대상으로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필요성을 알리는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강연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업무를 담당했던 최용선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미래세대를 위한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이란 주제로 진행한다. 이번 강연회는 최근 광주시가 광주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 동시 이전 찬성 여론 증가에 힘입어 객관적이고 올바른 정보 제공 차원에서 마련했다. 앞서 광주연구원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무안·함평 주민 각 500명을 대상으로 ‘군공항 이전 위치 의향서 제출, 민간·군공항 통합(동시)이전’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무안지역에서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 찬성 50.6%, 반대 41.8%, 모름·무응답 11.2%로 조사됐다. 특히 군공항 이전 예정지가 포함된 해례면(59.7%), 무안읍(51.5%), 현경면(51.2%)은 찬성 여론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 호 기자

국민 63% “정년, 국민연금 수급과 맞춰야” 2033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65세로 늦춰져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추후 65세로 연장되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정년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여론조사 전문가인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4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법정 정년연장에 62.8%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71.9%, 50대 68.3%, 30대 63.5%, 60대 61.2%순

이었다. 20대(48.5%)를 제외하면 전 연령층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68.6%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 중 26.2%는 올해 안으로 법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기 국회에서 해야 한다는 응답은 16.7%에 그쳤다. 정년연장 방식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나 공공·민간 구분 없이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48.8%로 가장 높았다.

“예산 낭비 카톡 신고하세요” 광주시의회, 신고방 운영

광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1일부터 예산 낭비 카톡신고방을 운영한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광주시와 시교육청, 공기업, 산하기관과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예산 낭비 사례를 쉽고 편리하게 제보 받고자 ‘광주 예산낭비 신고센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하려는 시민은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광주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검색해 입장하면 된다. 예산낭비 신고는 익명 또는 실명으로 가능하며, 제보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카톡 오픈채팅방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 된다. 특히, 제보받은 내용은 예·결산심의 과정에 반영되는 등 각종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명노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 낭비 신고센터는 예산 낭비 사례 뿐 아니라 예산 절감 아이디어 제안과 함께 예산 관련 정보와 소식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예산네트워크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신수정 의원 지방시대 엑스포서 ‘청소년 4조례’ 전파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이) 1일부터 사흘간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가해 지방의회 우수 사례로 선정된 ‘광주시 청소년 4(four)조례’를 홍보했다.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국가교육위원회, 17개 시·도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개최해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 사례에 대한 소통이 이뤄지는 공간이다. 2004년 시작한 균형발전박람회와 2013년 시작한 지방자치박람회를 지난해부터 통합해 개최하는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이기도 하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엑스포에서 지방의회 분야 주민 참여 우수사례로 선정된 ‘포유(For youth), 광주시 청소년 4(four)조례’의 제정 배경과 성과를 전시·소개한다. 광주시 청소년 4조례는 신 의원이 지난 2021년 대표 발의한 조례로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 유기적 정책 지원을 위해 ▲광주시 청소년 기본 조례 ▲광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광주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광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조례 등 4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입법 제정했다.



제58회 전국여성대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매우 실망, 국정기조 전환 없어” 민주, 윤 시정연설에 “국민을 원숭이로” “양두구육”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대해 “조삼모사”, “맹탕 연설”, “F학점”이라고 총공세를 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국민이 옳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제 시정연설에 대해 기대가 상당히 많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 연설 매우 실망스럽다”며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변명에 우리가 요구한 전환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정건정성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며 “민생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없이, R&D예산 삭감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있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으로 보면 병사 복지에 예산을 1857억이나 삭감하겠다고 한다. 이런 걸 조삼모사라 하지 않느냐. 국민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며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뺏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활비부터 줄이라는 지적을 겹쳐히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의사 정원 확대는 어디로 갔느냐”며 “정부가 국정을 하는데 있어 국정과제를 던졌다가 반응을 봐가면서 슬그머니 철회하고, 또한 번 던져봤다가 반응 시원찮으면 없애는 식으로 국정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엄중하게 진지하게 국정에 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조삼모사보다 더 나쁜 것이 빈 음식접시를 내는 거 아니냐”며 “같은 내용을 갖고 장난치는 거도 문제지만 빈발하는 건 더욱더 심각한 문제다. 정책을 냈으면 진지하게 관찰해야 되고 내기 전에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아주 초보적인 조언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반성제로, 공감제로, 비전제로, 시정연설은 맹탕 그 자체”라며 “R&D에 대폭 삭감했는지, 보완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대안도 해법도 없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역대급 세수팽크에 진단도, 대책도 못 내놓고 대외경제여건은 앞으로 점점 어두운 전망뿐인데 무역수지,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타개책도 없었다”며 “그저 총선을 선심성 예산만 나열했다. 방향도, 비전도 없는 F학점 시정연설”이라고 혹평했다.

여당, 오늘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야 “졸속” 권철승 수석대변인 백브리핑 “백년대계...졸속”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의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졸속 진행 우려를 표했다.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건 정말 국가 백년대계이지 않다.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많은 토론이 필요한 것인데 졸속으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며 실행 추진을 본격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을 간단하게 고치

는 것 같으면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지만 이런 정말 국토의 새로운 디자인이다. 졸속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답했다. 민주당 내 논의가 진척됐는지 묻자 “아마 모임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역구 의원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그럴 것”이라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홍의표 원내대표가 행정체계에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는 “그런 옛날부터

있던 이야기. 전국을 광역보다 좀 작은 단위 몇 개로 나누는 게 오랜 세월 유력하게 검토된 이야기. 그걸 다 폐기하고 다른 이야기한다는 건데 급하게 졸속으로 갈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말했는데 김포의 서울 편입은 서울을 크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목소리라는 지적에 공감하며 “당정 간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한 건가 싶기도 하다.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뉴스